

광산發 ‘풀뿌리 정책’ 대한민국 표준이 되다



전국 지자체 첫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광주시 등 전국 공공기관 9만명 정규직 전환 이끌어
사각지대 좁힌 민관연대 복지모델 시행...정부도 벤치마킹
월봉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전국 서원·향교프로그램 모델로

1995년 6월 27일은 지역민의 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은 역사적인 날이다. 지방자치는 이후 22년 동안 진화를 거듭했다. 단순히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만을 맡아 하던 수준에서 이제는 독자적인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광주시 광산구는 성년이 된 지방자치제도의 역량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초 자치단체로 꼽힌다.

특히 민선 5·6기 광산구청을 이끌고 있는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노동, 복지,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주민중심’, ‘약자 중심’의 정책적 시도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올바른 정책 방향과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지방자치법상 광산구의 지위는 전국 69개 자치구 중 하나지만, 지난 7년 동안 광산구가 이룬 성과는 자치구의 영역을 뛰어넘는다.

광산구가 첫 시도한 정책들은 타 자치단체의 롤모델이 되고, 정부 표준 정책으로 채택할 정도로 반향도 크다. 광산구의 선진 정책들을 들여다봤다.

◇공공부문 9만명 고용안정 이끈 ‘정규직 전환’=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지난 2011년 1월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구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공공부문 최초로 선언했다. 그는 “동일 업무가 계속되는

데도 11개월만 근무하게 하고 사직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기관에서부터 모범적으로 풀어가자는 의미를 담아 추진하게 됐다”고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이때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광산구는 청사 청소, 영양사, 직영 복지관 근로자 등 120명을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정규직 정책은 고용안정에 그치지 않았다. 광산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게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의 임금체계에 호봉제를 도입하고 실질 임금도 높였다.

광산구는 2011년 3월 ‘광산구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에 관한 규칙’을 전국 최초로 제정해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제도로 완전히 정착시켰다.

최초의 정규직 전환은 다른 공공기관들의 반응을 불렀다.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전국의 공공기관과 지자체들이 광산구의 사례와 규칙에 대한 자료를 받아가거나, 벤치마킹을 위해 광산구청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년 1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발표했다. 이것은 광산구가 한 해 전 제정한 규칙과 거의 흡사해 눈길을 끌

었다. 광주시도 민선 6기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주요 시책으로 추진중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전국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모두 8만4000여명. 올해에는 5000여 명이 전환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결국 6년 전 광산구가 든 롤모델이 전국 공공부문 9만 명의 고용안정을 불러온 것이다.

◇사각지대 좁힌 민관연대 복지모델 정부도 수용=정부는 지난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시·군·구에 하나씩 두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읍·면·동까지 확장해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확장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과 관이 연대해 마을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맡는다.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이 제도의 배경에는 광산구의 ‘투게더광산 나눔운동’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10년 말부터 21개 동에서 활동한 투게더광산 동위원회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시스템을 갖춘 공공영역 그리고기 동성과 유연함을 갖춘 민간영역의 장점을 모아 마을의 복지사각지대를 좁히는데 크게 기여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4월 제도 시행에 앞서 전국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을 모아 실시한 교육에서 동 단위까지 뿌리 내린 광산구의 민관공동 복지망 성과를 중요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광산구의 민관공동 복지망은 전국 최초의 민간주도 비영리 복지법인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출범으로 이어졌다. 지난 2013년 11월 출범한 재단은 2015년 현재 총 10억여원의 기부금과 후원물품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동시에 마을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복지활동가 육성과 공공·민간의 복지연대를 뒷받침하는 사업도 추진중이다.

특히 광산구 복지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의 개념을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수혜 개념에서, 이웃과 이웃이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보살피고 돕는다는 연대 개념으로 전환한 것이다.

더불어락 노인복지관은 이같은 개념 전환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복지관 노인들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북카페를 스스로 만든 경험에 기반해 광주 1호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두부공장, 팔죽가게, 북카페를 직접 운영하는 복지관 노인들은 일자리 문제, 노후 사회참여 같은 노인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광주지역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교과서에 실려 아이들이 공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빛장 연 월봉서원 한국 문화재 활용사업 표준 모델 등록=“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월봉서원 프로그램은 전국 서원 활용사업의 모범을 세웠다.” 광산구가 진행하는 월봉서원 활용 사업에 대한 나선화 문화재청장의 평가다. 실제 월봉서원 활용 사업은 지난해 11월 문화재청의 ‘명예의 전당’에 등재돼 국비를 영구 지원받는 성과를 올렸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진행하는 서원·향교 활용사업 중 유일하다.

광산구는 굳게 닫힌 공간이었던 서원을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우리 고유의 인문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목표로 지난 2008년부터 월봉서원 활용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선비의 하루’, ‘고봉 기대승, 병월(氷月)로 기억되다’ 등 매년 새로운 주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유치원 아동부터 성인은 물론 외국인까지 흥미롭고 부담없는 형식으로 교육 철학을 알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살롱 드 월보, 꼬마철학자 상상학교, 살롱 드 월봉 등 13개 프로그램에 국내외 인사 6800여명이 참가했다.

대통령 자문기구 문화융성위원회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문화관광 담당 공무원 250여 명을 월봉서원으로 초청해 워크숍을 열 정도로 월봉서원 활용사업은 문화관광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월봉서원은 활용 프로그램은 6차 산업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월봉서원을 품고 있는 너브실마을 주민들은 ‘서원마을 너브실밥상’ 사업을 추진해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분양모집

해만 뜨면 돈이 들어오는 태양광발전사업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안정되고 지속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
-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
- ▶사업(장사)에 노하우 및 기술에 대해 자신 없는 분
- ▶창고, 축사, 공장, 땅 등 기타 부동산 소유하신 분

투자에 장점!!

- ▶특별한 기술적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 ▶적자를 보지 않는 사업!!
- ▶안정적인 전기 매입처 (한국전력·전력거래소 / 18개 메이저 발전회사)
- ▶안정적이고 반영구적인 발전설비 (모듈 수명 20년 보증, 보증서 발급)

태양광발전소 투자하고 싶은데 건물·땅 없는 분!!

H·P **011-608-9593**
CALL CENTER **1522-6570**

분양모집중

전국전역의 회사 보유분 발전소

상담문의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에이엠 (주)이엠
ENERGY Marketing
www.emsolar.kr